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4호 소개

□ 최신 세계헌법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무죄가 확정된 사람의 불이익을 위한 재심 규정의 위헌성> 사건에서, 새로운 사실·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었던 일부 범죄가 유죄로 인정될 유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기본법 제103조 제3항의 일사부재리원칙 및 기본법 제103조 제3항과 연계한 제20조 제3항의 소급효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난독증과 관련한 평가사항을 성적표에 기재하는 행정관행의 위헌성> 사건에서, 장애를 이유로 일부 과목의 평가를 생략하였다는 내용을 성적표에 기재하는 것은 학생들 간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해당 사안에서 난독증의 경우에만 이러한 내용을 성적표에 기재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상 선거조항의 해석> 사건에서, 연방헌법 제1조 제4항 제1호의 선거조항(Elections Clause)이 주의회에 연방선거 관련 규정을 제정할 독점적·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주의회가 획정한 연방의회 선거구 지도가 주법에 합치되는지 여부가 주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피고용인의 종교적 관행에 대한 고용주의 협조 의무 기준의 해석> 사건에서, 1964년 민권법 제7장상 피고용인의 종교적 관행에 합리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고용인의 의무에 관한 '과도한 어려움(undue hardship)' 기준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최소허용기준을 초과하는(more than *de minimis*)'

비용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상 전체적인 맥락에서 '상당한(substantial)'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어려움'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법정 퇴직 연령을 62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 법률안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투표 법률안은 프랑스 헌법 제11조에 따라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법률안이 프랑스 헌법 제11조 및 관련 법률명령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사건에서, 건강·안전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규정들을 고려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深地層) 처분방법을 규정하는 환경법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입법자가 환경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 가능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을 채택할 때는 미래세대의 역량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프랑스 통신원의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근친강간죄의 대상을 모든 미성년자로 확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 -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3년 7월 21일 n°2023-1058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에서는, 연령 차이가 5년 이상인 15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性的) 행위를 한 사람을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근친강간죄의 대상을 모든 미성년자로 확대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였습니다.